

‘파견검사만 120명’ 3대특검 속도… 이르면 이달 말 수사 돌입

李 대통령, 오늘 내 후보 추천 의뢰
기존 특검 비해 신속 출범 가능성

3대 특검, 윤 전 대통령·김씨 겨냥
출범 후 소환 어려움 겪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

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우원식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 것”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경제·노동5개 단체와 논의
민생경제 위기… 추경 시급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란 비전을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민주노동조합

총연맹)만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은 “필요한 의제마다 (단체는)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

경을 통해 서민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혁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어떤 분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법원 찾아 사법부 ‘압박’… 오후 의총은 취소

권성동 “규탄대회에 역량 집중”

김용태 “사전 협의 없이 의총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 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

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비판하는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

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